

class faced several difficulties such as tear down housing without adequate recompense, high cost of housing, shortage of affordable housing, etc. With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in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for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supporting to make livable community with respecting human relationship. Therefore, in this study organized the measures of each department policy, and tried to suggest to comprehensive measure for stable life of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At first, this study tries to search several measures to help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The current urban renewal projects have rarely considered for disadvantaged groups so far. To attain this end, this research starts wit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urban renewal projects such as Newtown Project, Redevelopment & Reconstruction project, and reviews the limitations from those projects. Next, it has established the basic principles of convergence urban regeneration for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To achieve this goals, individual policies might be link together as a comprehensive strategy.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are these; first, one crucial requirement to achieve the stability of housing infrastructure would be top priority; second, the systematic managemen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ment of business realizability.

Second, this research reviews the actual experiences in Urban regeneration for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in six countries - US, UK, Japan, Australia, Denmark and Brazil, and tries to draw up comprehensive suggestions through the case studies. In case of Korea, not only physical maintenance with single-house and multi-family housing, multiple housing support has been expended, but culture, society, interest functions have been conscious. On the other hand, in a foreign countries consider a question in its aspects as hardware;

creating a safe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software; building a community to live safely. Also, they try to draw the creative ideas and suitable information for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s in the planning process.

Third, This study looks into measures that are recently running policies, and deduct what our society need more for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First step is defining the concept of the 'ordinary people; neglected class of people who need support by public' with the prior research results. Second step is discovering a existing support government policies by matrix, it is consisted of a total number of seven policies issues including finance, education, security, health, traffic, housing and occupation. There are four types of matrix : ① the field of government policies in age groups, ② the integration in the field of government policies, ③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in the field of government policies, ④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in age group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e direction of constructing a stable system and a systematic approach in solving the problems. Especially, there is an need for an institutional framework considering integration with related business. This study suggested that four type of steps; first step: strengthen ties among related legislations, second step: systematic approach in solving the problems within government department policies related to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third step: integrated operating between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local governments departments, forth step: governance including government, civic group and nonprofit organization.

In sum, this research has started with draw up measures to support the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both physical and cultural aspects. As a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strategy for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ndividual policies might be improved and link together as a comprehensive strategy. To offer the stable housing for the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are the basic demands, and the central government need to try not only improvement of the housing environment, but it formed to provide high quality of place to live in local community.

- Key words_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comprehensive urban regeneration strategy, institutional framework

부 록

〈부록 1〉 1차 전문가 간담회 요약

- 일시 : 2011년 4월 6일(수) 14:00
- 장소 :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원외 : 하성규(중앙대 부총장(좌장)),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부장), 김은희(도시연대 사무국장), 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이미원(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주경미(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장), 홍인옥(한국도시연구소 <전>연구위원)
 - 원내 :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이왕건 도시재생전략센터장, 민범식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강미나 주거복지전략센터장, 박정은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 참석

□ 서민의 개념과 도시재생의 주체 관련

- 서민정책 개발 집중화 추세
 - 서민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서민은 소득으로 나눌 수 없고, 가장 기본적으로 서민용어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빈곤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질 개념(보편적 복지지향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그리고 함께”라는 공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서민에 대한 개념 검토시 그동안 정책의 수혜자로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

닌, 책임을 질 줄 아는 주체로서의 개념 포함 필요

- 서민의 개념에서는 특권과 계급이 없이 누구든지, 본인들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함
- 서민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주민욕구의 측면에서 접근 가능
 - 서민 생활권 등 시간과 공간적 개념의 적용을 고려해볼만하며 시간과 공간이 적용된 실태 분석도 가능함
 - 욕구에 근거를 둔 교육, 일자리, 고용, 주거 등 서비스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포괄적인 접근에 있어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추진력 있는 서민에 대한 고민 필요
 - 커뮤니티 활동주체를 강조하지만, 여기에 제시한 서민이 과연 추진력이 있는 계층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서민이 오히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융합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
- ‘서민지향 융합형 도시재생방안’이라는 제목에서 드는 느낌은 외부보다 내부를 중심으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중시하는 재생이라는 느낌을 줌
 - 이러한 서민위주의, 지역 내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지역민들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과 시간은 장시간이 소요되며 커뮤니티와 이해 집단간 갈등을 푸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주민간 갈등은 실행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 ‘서민지향적 융합형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인구의 유출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
 -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구감소도시에서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측면은 1차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2차적으로 살던 사람이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임
 - 특히, 도시재정비 이후 원주민 재입주율이 20%가 채 되지 않은 현재 상황

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그동안 서민층을 괴롭히고 떠나게 하는 외부인을 위한 재정비를 추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반면, 외국은 주민계층, 실업자, 학생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파악한 뒤 주민 토론을 통해 재정비를 시행해 왔으며 이 점이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임
- 외국인 노동자 등도 서민으로 포함될 필요성이 있음
- 앞으로 다문화, 이주노동자 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임
- 재생의 주체 명확화와 이에 기반을 둔 절차적인 문제 해결 중요
- 좀 더 취약한 지역, 개발이 덜 된 서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을 추진하고, 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시스템에서 지자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과 절차 확립이 필요함
- 절차적인 내용과 함께 그 안에서 사용할 기준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데 안 고려 가능

□ 융합의 개념 관련

- 융합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융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융합의 개념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Social Capital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도시재생을 할 때 물리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포함된 이러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
- 정책간 융합, 계층간 융합 등 다양한 융합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어떠한 융합 제시를 목표로 할 것인지 고민 필요

□ 정책분야 구분 관련

- 정책분야 구분 개념이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개념을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음
- 3안(안심, 안전, 안락)의 개념을 도입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안심, 안전도 복지 개념이지만 만약 교육에 보육이 포함되고 건강·복지(안락의 개념에서)로 포함된다면 사회복지시설을 일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사회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고려 필요
 - 주택이 아닌 사회시설에 대한 접근도 아동, 청소년, 여성 분야의 중요한 문제임
 - 시설, 공원 등이 포함되는 공적 공간에 대한 개념 포함
- 문화부분 포함 필요
 - 도시재생사업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문화를 포함한다면 지역의 문화사업이 들어가면서 지역 정체성 문제가 보완될 수 있을 것임
- 일할거리, 먹을거리, 잘 거리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개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사례분석 관련

- 국내의 건강한 커뮤니티 사례로 반송동과 고강동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음
- 네덜란드의 커뮤니티링크 등 주택운동부터 복지를 시작한 나라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비엔나 시 사례 : 유럽연합 기금확보를 통한 시민이 참여한 도시계획 수립 사례는 추천할만함
- 독일 소셜시티(social city) 조성사례 : 독일정부의 기금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청소년 범죄 해소 및 주민참여형 사업 지원 사례

□ 기타

- 결론부분에 대한 명확화 필요
 - 시범사업과 같은 사업의 성격으로 제시인지, 포괄보조금 제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사전에 정립할 필요가 있음

〈부록 2〉 2차 전문가 간담회 요약

- 일시 : 6월 15일(수) 14:00
-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 참석자
 - 원외 : 남철관(두꺼비 하우스 대표이사), 이주원(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지역사무국장), 윤수경(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 고용지원센터 소장), 박학룡(장수마을 마³⁹)을기업 대표)
 - 원내 : 박양호 원장, 이왕건 도시재생전략센터장, 민범식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강미나 주거복지전략센터장, 임은선 연구위원, 박정은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 참석

□ 서민일자리 관련 운영 중인 프로그램 소개

- 현재 계획수립 당시부터 고용센터에 지자체와 관련한 프로그램 또는 지원제도가 있음
 - 예, 취업 1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노동관련 제도로 자신의 가상계좌에 300만원이 적립되어 원하는 어느 곳에 가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비주택 거주자(쪽방, 비닐하우스 등)도 지자체가 추천하면 교육 가능하며 생계유지수당도 지급됨
 - 구직과정도 훈련시켜주고 전 과정을 동행하여 도움을 줌
- 버스를 개조한 교육 서비스 제공 : 한국폴리텍에서 찾아가는 서비스(컴퓨터 탑재차량)
 - 외지에 있어 교육의 기회가 낮은 계층에게 교육의 서비스 제공
 - 한국폴리텍과 협약을 맺으면 도시재생과 함께 추진가능
- 지자체와 기업이 연계한 지역특화 고용창출 사업 추진

- 지자체와 인력센터가 컨소시엄을 맺어 1년 목표 교육생수를 사전에 설정
- 사회적 기업 적극 장려
 - 취약계층, 비정규직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면 지원하고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하나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음

□ 사회적 재정비 필요

- 교통, 안전, 보건, 복지 등 제반요소 종합적 고려 필요
 - 이러한 제반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재개발, 재정비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음
 - 이를 사회적 재정비라 칭하고 있음
 - 살기 불편하고 먹고 살게 없다면 근본적인 재개발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 주거 중심적인 도시재생 접근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3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제안
 - 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에 마을마다 분산 배치되는 계획 필요
 -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이 있으나 본격화 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주거복지의 범퍼 역할로서 의미가 있음
 - ② 바우처제도 뒷받침 필요
 - ③ 최저주거기준 미달관련 고려 필요
- 독자적 생활 가능한 뒷받침 지원 필요
 - ① 소득창출을 통한 주거능력
 - 주택관리진단, 보수, 진단, 방법이 어떤 고용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 ② 지역경제 활성화
 -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주거안정

□ 제도적 과제

- 일반주택을 도시재생 관점에서 개보수, 리모델링하는데 서민이 확보가

능한 재원 검토 필요

- 이러한 기금이 녹색성장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에너지 절약, 녹색성장과 연계 필요

○ 관련 법제 정비 필요

-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이 주택공급에 포인트 맞추어 왔기 때문에 주택관리제도 등에 대한 제도는 없음
- 손봐야 할 법제가 매우 폭넓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련법제 정비 필요

□ 지속가능성 담보 필요

- 해피하우스 지속가능성 낮음 : 하나하나 재정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재개발하면 추가부담금 부담에 대해 동감하나 재생의 관점에서 이러한 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 필요

□ 주체간 명확한 업무분담 및 적극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다양한 민간주체들이 지자체, 국가 도시재생사업의 주도적 역할 필요
 - 큰 센터를 만드는 것 보다 기존의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형태로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음
- 정부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역할임
 - 지역재생 관점에서 인큐베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심층적 고민 필요
 -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임
 - 시장에 대한 충격과 사업을 유도하는 것 필요
- 컨설팅, 코디네이팅할 전문 지원조직 필요
 - 만석동 사례
 - 공부방을 20년 운영하던 사람이 구청에서 대안개발로 마스터플랜 짜는

의뢰를 받음

- 주민들이 이러한 것을 행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중간에 민간 등 주민-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중간 주체 필요

□ 인문학적 접근 필요

- 재생을 하면서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도시가 가지는 가능성 말하지만
- 왜, 보존하고 왜, 복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와 당위성,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인문학적 이론이 뒷받침 될 필요 있음
- 이러한 이론과 배경이 구축될 때 일반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 서민 주거안정 + 소득창출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본 틀 마련
 - 나머지 보건, 교육, 문화는 전문가가 향후 연구 가능하도록 방향과 공간을 남아 둘 필요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본 틀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향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 저성장시대 포괄정책으로 도시재생 필요
 - 가장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사업의 시장화여야 함
 - 주택재건축사업이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것은 아파트라는 재산가치 증식이 주된 요인이었음
 - 도시재생으로 제안되는 내용들은 당위성과 필요성은 있으나 작동되지 않는데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 경제적 이익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주민 자부담이 어려운 것이며 정부 재정투입만으로 도시재생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민간주체의 장기적 자력을 키워주는 것 중요

- 외국의 사례 소개 : 우범지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게 하도록 NGO에게 그 지역의 사용권, 운영권을 부여한 사례가 있음
- NGO단체가 이를 운영하면서 체육프로그램 발굴 후, 유료시설화하여 소득도 창출하고 환경도 개선되는 일거양득 효과 발생
- 공공이 막대한 인프라를 쏟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것이 주민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추가적 국내사례 소개

- 성북구 10분 도시 프로젝트(명지대 박인석 교수님 팀)
 - 주요 주민의 이용편의시설들이 도보 10분 또는 도보 5분 안에 이용 가능하도록 동네별 배치하는 사업을 성북구청을 중심으로 추진
- 안타까운 국내사례 소개
 - 대전시 무지개 프로젝트 : 대전시 재정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재정 투입하였고 민간영역 참여가 많았음
 - 이 사업이 침체된 요인의 핵심은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음
 - 적어도 정책의 변동이 있더라도 한번 구축된 거버넌스는 터닝 되어서는 안됨

□ 질의/응답

Q : 장애인, 노인교육 후 일자리를 다시 가지는 가능성 정도 낮는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제도가 있나?

A : 자비부담하고 오는 50세 이상의 교육자도 있음(예, 제과 및 제빵, 컴퓨터 등 활용한 제2창업 희망)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경비, 청소 등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교육 후 한자리에 3~5인 후보를 추천하여 현장에서 바로 채용)
- 고령자들이 오히려 의지가 굳건하고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

Q : 주민들도 도시재생을 위해 일정부분 부담해야 하는데 서민층 지불의사는 어느 정도 인가?

A : 현재는 매우 약한 상태임

- 역모기지 등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능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인식이 확산된다면 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됨
- 10년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제도를 만들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원 → 개량한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마을을 같이 가꾸어 나가는 방향 정립 필요
- 재개발이 아니고 재생사업도 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이러한 것이 축적될 때 자부담에 대한 동의 가능

Q : 행정주체중심의 사업추진 후 핵심인물이 빠져나가면서 사업이 침체되는 경우 많이 발생하는 데 시스템 통해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사람이 바뀌니 사업이 바뀌는 것을 제도나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A : 시스템이 부족하긴 하지만 1개 구청 내에 수많은 거버넌스 있음(성북구청 내에만 80개의 거버넌스 있음)

- 권력간 유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시민사회 주민역량과 조직화가 아직은 행정을 견인해 내고 압력을 형성하는데 약한 측면이 있음
- 제도를 여러 번 고민해 봤으나 쉽지 않은 내용임

Q : 고용지원센터 소장님 말씀 중 쪽방, 노숙인 관련 고용창출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적응이 되지 않아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되돌아가는 경우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A : 훈련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사전에 충분한 심리. 적성평가 실시

- 상담사와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훈련이 될 수 없음

Q :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성공규모는?

A : 현재 몸담고 있는 특정한 해당 동네는 알 수 있으나 일반화시키기 어려움

- 두꺼비 하우스는 200호 정도 규모. 작으면 작을수록 좋을 것임
- 30호 정도 규모로 한다면 한 동네 느낌이 들지만 이때 이와 같은 소규모는 민간이 운영을 한다는 것은 시장성 때문에 불가능할 것임

A : 단지의 경계를 두지 말자는 의견임

- 커뮤니티 형성은 길 또는 거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경계는 불분명 함
- 단지 개념 보다는 커뮤니티 거점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핵심이 되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 필요

Q : NGO 역할과 관련하여 NGO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관계가지기 위한 역량이 갖추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NGO 역할은 커져야 함

- 정부조직과 소통하며 주민조직 의사 전달하고 계획 주체,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 함
- NGO 자체도 사람역량을 위한 큰 지원 필요
- 경력 10년 이상 된 국장에서 월급 200만원도 지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단기간에 역량이 커지기 어려움
- 그렇기 때문에 시장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부록 3〉 원내 전문가 연찬회

- 일시 : 7월 26일(화) 10:00
- 장소 :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
- 참석자

박양호 원장, 이왕건 도시재생전략센터장, 민범식 녹색국토·도시연구
본부장, 장철순 연구위원, 천현숙 연구위원, 김혜승 연구위원, 정진규
연구위원, 박정은 책임연구원 등 참석

□ ‘서민지향 융합형’에 대한 정의

- ‘융합형’의 필요성 강조
 - 현재 부처별/정책부문별로 지원정책이 분산되어 있음을 문제제기하고
도시공간에 접목하여 공간상에서 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재정리 필요
- ‘도시재생’의 기본원칙에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해야함
 - 새로운 = “서민지향 + 융합 + 커뮤니티 중심” 2+1 모델 제시해야함
 - 기존 도시재생 모델의 한계를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로 제시
- 현행 정책분야에서 서민을 위한 서비스의 한계점 강조
 - 서민과 유리되어 있으며 부문별로 분리되어 있는 등의 문제 제기
 - 의료문제, 보육시설 등을 찾아 멀리 가는 등의 문제점 제시할것
- ‘서민지향 융합형’과 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목을 사용할 것
 - ‘서민’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민지향’ 그리고 ‘융합형’에
초점을 맞출 것

□ 정책분야 구분 관련

- 네 가지 유형의 매트릭스를 통합시킬 필요가 있음
 - 연령계층별, 융합 가능한 정책부문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임
 - 연령계층정책 분석 결과 보완검토 필요
- 2 by 2 매트릭스에 나타나는 한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정책분야 개념이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개념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강약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책부문별 서민정책의 예시에서 위계를 구분해야함
 - 연령계층·정책부문별 분석에서 빠진 부분 검토필요
- 교통부문, 건강부문의 융복합은 교통안전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추가 검토 필요

□ 추진 전략 비전과 제도화방안 명확히 제시

- 광범위한 대책 중 중요한 과제이나 결락되어 있는 항목 발굴 필요
- 종합계획 작성과 사업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함
- 실태파악에 집중해야 함
 -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통해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부문의 서민정책, 법·제도의 존재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임

〈부록 4〉 2008년과 2009년 미국 각 주의 중위소득과 지니계수

Median Household Income and Gini Index in the Past 12 Months by State and Puerto Rico: 2008 and 2009

(In 2009 inflation-adjusted dollars. Data are limited to the household population and exclude the population living in institutions, college dormitories, and other group quarters)

Area	2008 median household income (dollars)		2009 median household income (dollars)		Change in median income		2008 Gini coefficients		2009 Gini coefficients		Change in Gini coefficients	
	Estimate	Margin of error ¹ (±)	Estimate	Margin of error ¹ (±)	Percent		Estimate	Margin of error ¹ (±)	Estimate	Margin of error ¹ (±)	Estimate	Margin of error ¹ (±)
					Estimate	Margin of error ¹ (±)						
United States	51,726	73	50,221	74	*-2.9	0.2	0.469	0.001	0.469	0.002	-	0.002
Alabama	42,408	542	40,489	528	*-4.5	1.7	0.467	0.006	0.471	0.005	0.004	0.008
Alaska	67,413	2,295	66,953	2,331	-0.7	4.8	0.406	0.015	0.402	0.014	-0.004	0.020
Arizona	50,489	542	48,745	484	*-3.5	1.4	0.453	0.004	0.451	0.005	-0.002	0.006
Arkansas	38,778	652	37,823	629	*-2.5	2.3	0.459	0.007	0.461	0.006	0.002	0.009
California	60,625	251	58,931	274	*-2.8	0.6	0.473	0.003	0.467	0.002	*-0.006	0.003
Colorado	57,030	646	55,430	704	*-2.8	1.7	0.456	0.005	0.453	0.005	-0.003	0.007
Connecticut	68,283	983	67,034	993	-1.8	2.0	0.485	0.006	0.480	0.006	-0.005	0.009
Delaware	58,173	1,472	56,860	1,744	-2.3	3.9	0.442	0.011	0.434	0.010	-0.008	0.014
District of Columbia	57,654	2,445	59,290	1,710	2.8	5.3	0.540	0.013	0.532	0.010	-0.008	0.016
Florida	47,452	354	44,736	290	*-5.7	0.9	0.472	0.004	0.469	0.003	-0.003	0.005
Georgia	50,328	443	47,590	414	*-5.4	1.2	0.468	0.005	0.469	0.004	0.001	0.006
Hawaii	67,384	1,992	64,098	1,574	*-4.9	3.7	0.425	0.010	0.425	0.009	-	0.013
Idaho	47,248	905	44,926	953	*-4.9	2.7	0.422	0.009	0.421	0.008	-0.001	0.012
Illinois	55,671	407	53,966	404	*-3.1	1.0	0.467	0.004	0.469	0.004	0.002	0.005
Indiana	47,657	521	45,424	455	*-4.7	1.4	0.438	0.005	0.434	0.004	-0.004	0.006
Iowa	48,559	600	48,044	426	-1.1	1.5	0.429	0.005	0.431	0.005	0.002	0.007
Kansas	49,686	571	47,817	670	*-3.8	1.7	0.442	0.006	0.444	0.005	0.002	0.008
Kentucky	41,299	472	40,072	535	*-3.0	1.7	0.468	0.006	0.464	0.005	-0.004	0.008
Louisiana	43,288	652	42,492	629	-1.8	2.1	0.478	0.006	0.473	0.006	-0.005	0.008
Maine	46,331	810	45,734	935	-1.3	2.7	0.434	0.008	0.432	0.008	-0.002	0.012
Maryland	69,844	755	69,272	696	-0.8	1.5	0.438	0.005	0.448	0.004	*0.010	0.006
Massachusetts	64,941	703	64,081	680	-1.3	1.5	0.472	0.004	0.468	0.005	-0.004	0.007
Michigan	48,246	455	45,255	358	*-6.2	1.2	0.451	0.003	0.453	0.004	0.002	0.005
Minnesota	56,767	513	55,616	546	*-2.0	1.3	0.444	0.005	0.439	0.004	-0.005	0.006
Mississippi	37,749	698	36,646	695	*-2.9	2.6	0.479	0.007	0.470	0.008	-0.009	0.010
Missouri	46,654	377	45,229	519	*-3.1	1.4	0.448	0.005	0.450	0.004	0.002	0.006
Montana	43,443	1,176	42,322	1,073	-2.6	3.6	0.447	0.010	0.431	0.009	*-0.016	0.013
Nebraska	49,342	756	47,357	804	*-4.0	2.2	0.427	0.006	0.440	0.007	*0.013	0.009
Nevada	56,137	805	53,341	981	*-5.0	2.2	0.432	0.008	0.433	0.006	0.001	0.010
New Hampshire	63,650	1,598	60,567	1,385	*-4.8	3.2	0.418	0.007	0.431	0.009	*0.013	0.012
New Jersey	69,938	638	68,342	659	*-2.3	1.3	0.462	0.004	0.465	0.004	0.003	0.005
New Mexico	43,177	938	43,028	1,033	-0.3	3.2	0.459	0.007	0.453	0.007	-0.006	0.009
New York	55,486	433	54,659	396	*-1.5	1.0	0.505	0.003	0.502	0.003	-0.003	0.005
North Carolina	46,244	438	43,674	375	*-5.6	1.2	0.463	0.004	0.464	0.004	0.001	0.006
North Dakota	45,497	1,018	47,827	995	*5.1	3.2	0.450	0.012	0.450	0.013	-	0.018
Ohio	47,428	288	45,395	350	*-4.3	0.9	0.450	0.003	0.453	0.003	0.003	0.004
Oklahoma	42,624	646	41,664	502	*-2.3	1.9	0.456	0.005	0.460	0.005	0.004	0.007
Oregon	49,714	651	48,457	623	*-2.5	1.8	0.447	0.005	0.443	0.005	-0.004	0.007
Pennsylvania	50,245	274	49,520	286	*-1.4	0.8	0.458	0.003	0.460	0.003	0.002	0.004
Rhode Island	54,877	1,705	54,119	1,522	-1.4	4.1	0.460	0.014	0.457	0.011	-0.003	0.017
South Carolina	44,053	589	42,442	565	*-3.7	1.8	0.463	0.006	0.462	0.005	-0.001	0.008
South Dakota	46,008	1,133	45,043	1,214	-2.1	3.6	0.448	0.013	0.452	0.015	0.004	0.019
Tennessee	43,311	375	41,725	439	*-3.7	1.3	0.471	0.005	0.467	0.005	-0.004	0.007
Texas	49,453	279	48,259	244	*-2.4	0.7	0.475	0.002	0.474	0.003	-0.001	0.004
Utah	56,304	772	55,117	803	*-2.1	2.0	0.411	0.007	0.414	0.008	0.003	0.010
Vermont	52,207	1,064	51,618	950	-1.1	2.7	0.432	0.012	0.428	0.009	-0.004	0.016
Virginia	61,064	462	59,330	482	*-2.8	1.1	0.460	0.004	0.456	0.003	-0.004	0.005
Washington	57,536	529	56,548	528	*-1.7	1.3	0.443	0.005	0.439	0.004	-0.004	0.006
West Virginia	37,677	915	37,435	707	-0.6	3.1	0.453	0.009	0.463	0.008	0.010	0.012
Wisconsin	51,942	348	49,993	405	*-3.8	1.0	0.426	0.004	0.432	0.004	0.006	0.006
Wyoming	52,931	1,838	52,664	1,877	-0.5	5.0	0.444	0.020	0.415	0.014	*-0.029	0.025
Puerto Rico	18,318	338	18,314	327	-	2.6	0.541	0.007	0.532	0.007	-0.009	0.009

* Statistically different at the 90 percent confidence level.

- Represents or rounds to zero.

¹ Data are based on a sample and are subject to sampling variability. A margin of error is a measure of an estimate's variability. The larger the margin of error in relation to the size of the estimate, the less reliable the estimate. This number when added to and subtracted from the estimate forms the 90 percent confidence interval.

Sources: U.S. Census Bureau, American Community Surveys, 2008 and 2009, Puerto Rico Community Surveys, 2008 and 2009.

출처 : <http://www.census.gov/prod/2010pubs/acsbr09-2.pdf>

〈부록 5〉 정부부처별 서민관련 정책추진 현황⁴⁰⁾

□ 행정안전부

대상구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소득	연령층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							
소득 수준 1~4 분위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 어린이·노 인·장애 인 보호 구역 대			
		장애유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아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청소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 어린이 보호 구내 법규 반칙 태도 인상	▪ 청소년 성예 대 대상 범죄 예방 강화 ▪ 학교 안전 강화 책 ▪ 어린이 학교 안전 지도 확대	▪ 지역 공 공 일 사 진 소 득 지 체 리 추 진 우 선	▪ 약 계 정 해 위 보 육 고 보 급	총 차 를 정 교 중 PC
	청장년	기초생활수급자		▪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애인				▪ 어린이·노 인·장애 인 보호 구역 대	▪ 장애인 직업 공 확 대		
		기타 (소상공인, 세입자, 임대소득자 등)	▪ 영세 소 기업에 대 한 금융· 판로 개척 지원 「희 망드림 론」			▪ 「SOS 국민 안심 비 도 입」	▪ 시간제근 무 활성화 ▪ 사회적 취 약 계층 에 맞 은 일 자 리 공 공 하 역 지 공 하 역 동 체 지 리 사 업 추진		▪ 출 산 장 지 역 제 공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장애인							

40)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현재 추진 정책현황을 중심으로 정리

□ 여성가족부

대상구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소득	연령층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								
소득 수준 1~4 분위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장애유아					▪유연근무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을 위한 홍보 추진 ▪가족친화직장 인증기업 인 센티브 강화 ▪노사정위 합 의를 바탕으 로 민간기업 의 근로시간 단축추진	▪가족생활교 육 및 가족 상담 서비 스 내실화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 정 등)								
	아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청소년 국제 교류 활성 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 원 ▪청소년 수련 시설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청소년 인터 넷 게임 중 독 예방 및 치료 강화
		장애아동, 청소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 정 등)			▪위기청소년 서비스 제 공을 위한 인프라 확 충 ▪성범죄자 재 조범방지 치강화 ▪성보호를 위 한 교육 및 시설의 확 충					
	청장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 대 ▪국제전문여성 인턴 ▪주부인턴제 ▪가사·양육지 원 ▪직업상담	▪여대생 커리 어개발센터	
		기타 (소상공인, 세입자, 임대소득자 등)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대상구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소득	연령층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							
소득 수준 1~4 분위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장애유아		▪주거급여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지역 아동 센터	▪육아 휴직 시료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직장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확대	▪아이사랑 보육포털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 확대 ▪자연분만 수가 인상 등 산부인과 건강보험 수가 개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건강관리 서비스 제도화
	아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장애아동, 청소년		▪주거급여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아동학대에 방 인프라 강화 ▪대상자 별종교 집중적 보호 강화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 대책 추진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멘토-멘티 풀 구성 확대 ▪아동학대예방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 ▪아동 인지능 향상 서비스 확대 실시
	청장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주거급여					
		기타 (소상공인, 세입자, 임대소득자 등)	▪희망기움뱅크사업 ▪미소금융 ▪희망출세로자생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보육시설 안전사고 공제제도 '안전판'	▪자립지원사업 체계화	▪무상보육확대 실시 ▪정부지원보육료, 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지급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저소득층지역보육료 절반만 부담 ▪의료급여제도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급여					▪의료급여제도

□ 문화체육관광부

대상구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소득	연령층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							
소득 수준 1~4 분위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 육아 휴직 급여 보육 복귀 센터 ▪ 장애 및 직인		
		장애유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아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장애아동, 청소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 문화 바우처	
	청장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소상공인, 세입자, 임대소득자 등)					▪ 문화 일 자리	▪ 문화 바우처 ▪ 문화 순회 사업 ▪ 문학나눔 ▪ 복지 관광 사업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 문화 바우처 지원	
		장애인							

□ 교육과학기술부

대상구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소득	연령층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							
소득수준 1~4분위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장애유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 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초등교육 시스템 구축	▪ 육아 휴직 급여 인센티브	▪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 초등학교 「365일 온종일 안전한 학교만들기」 대책 추진 ▪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초등교육 시스템 구축 ▪ 폭력·안전 사고 걱정없는 학교 ▪ 학교 안전 강화 대책 ▪ 방과후 학교		▪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지원 체제 구축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저소득층 및 유아·장애학교 육지원 확대			
	청장년	기타 (소상공인, 세입자, 임대소득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노인	장애인							

□ 지식경제부

대상구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소득	연령층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							
소득 수준 1~4 분위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장애유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아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청소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청장년	기초생활수급자		▪ 서민아파트 지역 난방 공급					
		장애인		▪ 서민아파트 지역 난방 공급					
		기타 (소상공인, 세입자, 임대소득자 등)	▪ 대기업 출 연 '동반성 장 펀드' 신규 조성· 확대						▪ 대중소 공 동기술개발 지원센터 운영 ▪ 경영 멘토 링 ▪ 플라스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품질 등 연 수 프로그램 설치 및 연 수업 체 확대
			▪ 중소기업 육성 신재 생 에너지 보증펀드 (1,000억 원) 조성						
			▪ 하도급 대 금지불 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 입						
			▪ 민관 공동기 술개발 펀 드(300억원) 조성						
▪ 「기업성장 동반성장 진흥재단」 설립(2,3차 협력업 체 지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자료 :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및 2011 업무계획 참고

□ 국토해양부

대상구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 자리	교육	건강
소득	연령층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							
소득 수준 1~4 분위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 기존주택매입임대(그룹홈) - 기존주택전세임대 - 영구임대주택					
		장애유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기존주택전세임대					
	아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 기존주택매입임대(영세민) - 기존주택전세임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 원 - 영구임대주택					
		장애아동, 청소년		기존주택매입임대(그룹 홈)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 원					
	청장년	기초생활수급자	보금자리론	- 영구임대주택 보급 - 기존주택전세임대					
		장애인		- 기존주택매입임대(그룹홈) - 기존주택전세임대					
		기타 (소상공인, 세입자, 임대소득자 등)	- 보금자리론 - 저소득가구 전 세 자 금 지원	- 대학생 보금자리 주택 - 공공임대주택 보급 - 기존주택전세임대 - 신혼부부전세임대 - 도시형생활주택 보급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보금자리론	- 국민임대주택 보급 - 영구임대주택 보급					
		장애인		기존주택매입임대(그룹 홈)					

□ 중소기업청

대상구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소득	연령층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							
소득 수준 1~4 분위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장애유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아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장애아동, 청소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 특성화전문 계고 육성 사업 - 청소년 비 즈쿨 페스 티벌	
	청장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장애인 기 업 자금지 원 - 장애인기업 자금 및 보 증우대 지 원					- 중증장애인 맞춤 창업 프로그램 - 장애인 창 업경진대회 - 장애인 능 력별 맞춤 형 창업강 좌 개설	
		기타 (소상공인, 세입자, 임대소득자 등)	- 햇살론 - 성장산업 특례보증 - 소기업/소 상공인 신 용보증 - 중소기업 신용보증지 원제도 - 소상공인 지 원 자 금 지원 - 실패기업인 재창업자금 지원				-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 - 창업지원자 금 지원 - 소기업 CEO 교육 - 창업컨설팅 지원 - 소상공인 e-러닝 교 육 - 성공창업패 키지 교육 - 소상공인 무료법률구 조 지원 사 업 - 소상공인 경영개선교 육 - 소상공인 혁신아카데 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시니어 창 업지원						
		장애인							

□ 환경부

대상구분			금융	주택	교통	안전	일자리	교육	건강
소득	연령층	사회계층 (사회적 약자)							
차상위계층 (소득수준 1~4분위)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 부모 가정							
		장애유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아동,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청소년 기타 (세입자 가정, 임대소득자 가정 등)		▪ 옥내급수관 개량 ▪ 수도분기관 연결 무상지원					
	청장년	기초생활수급자		▪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주거환경 개선) ▪ 15년 이상된 옥 내 급수관 개량 비용 지원 ▪ 노후된 서민 주 거단지에 공동 급수시설 설치 ▪ 옥내급수관 개량 ▪ 수도분기관 연결 무상지원				▪ 수도의화(취 지역서민지 상)	
		장애인							
		기타 (소상공인, 세입자, 임대소득자 등)		▪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주거환경 개선) ▪ 15년 이상된 옥 내 급수관 개량 비용 지원 ▪ 노후된 서민 주 거단지에 공동 급수시설 설치	▪ 200만가구 탄소포인트제 ▪ 탄소다이어 트 2030	▪ 1시·도 1 촌 자매 결연마을	▪ 빈그릇 희망운동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 옥내급수관 개량 ▪ 수도분기관 연결 무상지원					
		장애인							